광화문 집회 참석 뒤 확진 일가족, 행정명령 뭉개고 '활보'

방역당국 설득·명령에도 '집회 참석 안 했다' 거짓말

PC방·도매센터 다녀와 궤변 일색…확진 뒤 참석시인

5명 중 4명 참석자 명단에 없어…추가 모집책 조사중

"서울 광화문 집회 안 다녀왔다니까요. 코로나19 검사 안 받아요."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 양산동에 사는 코로나19 감염 일가족 5명(지역 363·369·370·371·373번째 확진)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사실을 숨겨 방역망을 허문 것으로 드러났다.

시 방역당국은 지난달 22일 A씨(20대 남성, 363번 환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질병관리본부 기지국 확인 등)에 A씨가 포함돼 있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명령하기 위해서였다.

A씨의 전화였지만, 어머니인 B씨(370번 환자)가 받았다.

B씨는 "우리는 집회와 상관이 없다. 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발뺌과 거부가 이어졌다.

당국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 가족의 신원과 주거지를 확인, 설득을 이어갔다. A씨는 최초 연락을 받은 지 사흘만인 25일 1차 검사를 받았으나 재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달 28일 재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의 비상식적 행동은 반복됐다. B씨와 남편(369번), 아들·딸(A씨 동생, 373·371번)은 A씨 확진 판정 다음날인 29일 오후 4시10분부터 10분가량 모 도매센터를 다녀왔다.

다음 날인 30일 검사를 받아 4명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남동생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직후인 지난달 16일과 17일 양산동 PC방을 다녀오기도 했다. 약 2주간 방역망에서 벗어나 추가 감염 확산 가능성을 키운 셈이다.

A씨를 제외한 4명은 질병관리본부의 위치 추적(GPS) 기록과 광주시가 파악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숨은 참가자였다.

양성 판정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 '일가족 5명 모두 대절한 버스(북구 임동 119안전센터 앞 3대)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다'고 시인했다. 지난달 19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전원 의무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일상 생활을 이어가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가족은 A씨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후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연장 기간(지난달 30일까지)이 남았다며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 검사자 확대 가능성, 접촉자·동선 파악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시 방역당국은 A씨 일가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또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해 공개할 방침이다.

A씨를 제외한 4명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집회와 관련한 다른 모집책이 있었는지, 숨겨진 다른 참석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 일가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루 빨리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면, 접촉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을 반복해 지역 감염 확산 우려를 부추겼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광주 지역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6명 중 28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검사 불참 통보·답변 거부·연락 두절 등 이유도 다양했다. 이들이 새로운 지역 감염원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3차유행' 확진자 10명 중 6명 무증상…방역 '암초'

무증상 감염, 방역망 내 관리 어려워 '조용한 전파' 우려

광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이 최근 3주간 이어지고 있는 '3차 유행' 기간 중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8월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인 집단 감염이 다시 시작된 '3차 유행' 기간 중 발생한 환자는 158명이다.

이 가운데 92명이 별다른 증상이 없어 확진자 중 무증상 비율은 58.2%에 이른다.

광주 지역 전체 확진자 중 무증상 비율 51.6%(374명 중 193명)와 비교하면, 지역사회 내 최근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무증상 감염자는 기존 확진자와의 접점이 확인돼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한, 방역망에서 발견 또는 관리되기 어렵다.

'방역 사각지대'로 남은 무증상자는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 생활을 하다가 추가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무증상 감염 비율 증가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확진자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 코로나19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해서 체내 바이러스 보유량이 낮거나 전파력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 곳곳을 돌며 추가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주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그러면서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또는 확진자와의 직·간접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코로나19, 점심 풍경 바꾸다…도시락 '혼밥' ↑

외식 자제 분위기로 식당가에서는 포장 주문만 늘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닷새째인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청 홍보전산과 직원들이 점심시간대 주문한 도시락을 옮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광주 지역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도 바뀌고 있다.

구청 공무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달 24일부터 오전 11시30분, 정오, 오후 12시30분부터 1시간씩 '3부제'로 점심을 먹고 있다. 부서별로 함께 식사하는 인원을 나눠 직장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같은 직군의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했다.

구청 구내식당도 지난달 25일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하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늘고 있다. 공무원들은 한주에 2~3차례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사무실에서 먹기 편한 샌드위치, 샐러드, 햄버거, 편의점 도시락을 구입해 가져오기도 한다.

지난달 31일 북구 홍보전산과 직원 19명도 도시락을 주문, 각자 자리에서 거리를 두고 먹었다. 다른 부서 직원도 전문업체에서 구입한 도시락을 챙겨갔고, 분주히 움직이는 배달원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광주 도심 식당가에도 외식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식당가는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다.여름철 별미로 연일 만석이던 국숫집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대기 손님도 거의 없고, 매장 곳곳에 1~2개 식탁이 비어있었다.

유명 음식점 본점도 대기 손님이 1~2명에 불과했다. 매장에는 여유 좌석이 있었으나 무리해서 손님을 받지는 않았다.

손님 대부분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식사 중에도 대화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오유나기자